

# 의대 정원, 4월 중하순까지 '집중배정' 예정

### 전날 보건복지부서 '2000명 증원' 공식 통보 받아 "수도권 의대 배제 안해...소규모 의대 고려해야" 3월까지 대학들에게 증원 수요 등 제출받을 방침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7일 거듭 밝혔다.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입시 전형은 오는 5월 말까지 각 대학들이 확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절차를 4월 중하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3~4시에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점 배정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교육부에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을 점검한 결과를 고려한다', '소규모 의대의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원 배분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배분 기준을 자체 수립한 뒤 전국 의과대학 40개교에 통보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각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받을 방침이다.

정원 배분 과정에서 고려할 의대의 현재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11월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살핀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의대 40개교로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확인했다.

부속병원의 현황과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했다.

일각에서 지방 소규모 의대의 교육여건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증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에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수요를 많이 제출했다"며 "대학들은 지금 교육여건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각 의대의 수요 제출이 끝나면, 교육부는 다시 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대 정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배분 기준을 다음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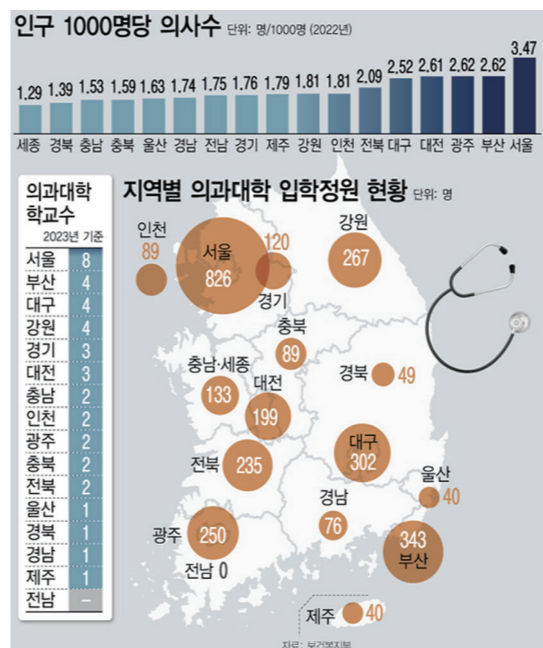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의대의 정원을 아예 늘리지 않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소규모 의과대학의 기준을 50명 미만이라고 한다면 5개교가 수도권에 있다"며 "아예 배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6일) 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 60%를 단안한 건 아니다"며 "예시로 말한 걸로 이해하면 된다.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배정 기준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는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며 대학들이 60%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



수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입학 자원이 적은 강원·제주는 20%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6일) 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 60%를 단안한 건 아니다"며 "예시로 말한 걸로 이해하면 된다.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배정 기준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는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며 대학들이 60%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



### 광주 동부소방, 새해맞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광주 동부 소방서는 지난 7일 청사 앞에서 새해맞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강진소방,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실시

강진소방서는 7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강진군 51산림조합 사거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여수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여수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무안경찰,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무안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무안=이기성기자



### 나주경찰, 설명절 맞이 선제적 범죄예방활동 실시

나주경찰은 설명절 연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나주=기동취재본부



### 장흥경찰, 설 연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장흥경찰은 7일 오전 군민회관 회전교차로에서 참여치안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설연휴 광주·전남, 대체로 맑고 포근...10일 약한 비소식

### 큰 추위 없어...귀성길 불편 없을 듯

설 명절 연휴 기간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귀성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설 연휴 기간 기상전망'에 따르면 9일부터 12일까지 광주와 전남은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 당일인 10일에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광주와 전남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8~9일에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맑고 해상 물결도 0.5~2.0m 수준으로 높지 않겠다. 육상은 물론, 해상, 항공 등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0일에는 오전까지 대체로 맑다가 오후 차차 흐려져 약한 비가 내릴 수 있어 귀경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연휴 후반인 11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은 대체로 맑겠다. 기온도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8~10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12일에는 평년보다 2~4도 높아 다소 따뜻하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11일에는 오후부터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쌀쌀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며 "10일 오후부터 11일 사이 기압골의 통과 시점에 따라 강수 시점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오색빛깔 가래떡

설을 사흘 앞둔 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자시장내 한 떡집에서 직원이 오색 가래떡을 포장하고 있다.

## 잡고보니 베트남 유학생 배달대행 불법취업 적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달대행 일자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 단속해 총 7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학생 상당수는 유학(D-2)이나 귀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배달대행 업체는 취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에 따라 적발된 유학생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모든 유학생은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광주·전남에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유입이 많고, 동남아시아 국가 특성상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문화 탓에 배달대행 불법 취업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유학생들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는 무면허·무보험 운전자이기도 했다.

오유나기자